

2021년도  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 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
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
2022. 6.



대한민국정부

## - 목 차 -

### (공정거래위원회: 82건)

1. 플랫폼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사우대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-----1
2. 라이브커머스 및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문제에 대한 관련 시장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-----1
3. 전자상거래법 통과 이전, 개인 간 거래에서(C2C)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과 피해 및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---2
4. 렌터카 사고시 면책금, 휴차료 등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-----2
5.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회사 선정 입찰 및 6개 필지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할 것-----2
6.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정위는 스스로의 청렴도를 높여 공정위의 권위를 세우고, 공정위의 심사 및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것-----2
7. 미국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(구조적 분리 등)과 같은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것  
-----4
8.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중소기업의 동의의결 제도 신청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-----4
9.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---4
10.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-----5
11. 네네치킨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것-----5
12. 가맹점의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구속의 범위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  
-----6
13. 기업결합 심사 인력 확충 및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6

14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등급 평가 제도 평가 신청을 저조, 예산 부족 등 제도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-----6
15. 해운 공동행위 사건 관련 과징금 결정 시 해운업계의 특성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-----7
16. 해운담합 사건을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며, 심의신속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할 것-----7
17. 와인수입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할 것-----7
18. 사건처리 장기화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-----7
19. 사건처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체가 다수인 부산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-----7
20.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 증원을 통한 별도 조직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-----8
21. 생협 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필요 및 공제사업이 연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-----8
22.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-----8
23. 5G 관련 강매행위 및 불공정 약관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과기부와 방통위를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 것-----9
24.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을 신속히 조사하고, 같은 그룹 내 두 곳 이상의 계열사에서 응찰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-----9
25.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했던 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게임산업법 시행 전까지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-----10
26. 플랫폼 기업의 M&A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-----10
27. 기술유통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-----10

28.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평판 하락, 소비자 불매운동시 피해를 입는 대리점주를 위해 비현실적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경영진과 대리점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----11
29.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물품형 상품권의 가액 이하 결제 및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, 브랜드 사업자, 상품권 발행자와 함께 모여 적극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-----11
30.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-----12
31.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-----12
32. 나이키 미국 본사의 원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, 계약종료 등 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-----12
33. 롯데마트 코리아에 대한 나이키코리아의 제품 공급 중단 사례 등 국내 기업, 가맹점주들이 해외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-----12
34. 쿠팡이츠의 수수료율 현황 등 업계실태를 확인하고 영세·중소업체에 대한 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-----12
35. 해외 구매 대행 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약 철회 권리 보장 및 플랫폼 기업의 의무·책임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-----13
36.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자사주 맞교환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것-----13
37.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례와 같이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, 심사지침 개선 등을 검토할 것-----13
38.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-----13

39.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에 관한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제도 운영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	14
40. 플랫폼의 수수료 책정 체계 등에 대한 평가·분석 및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의 사업범위 확장과 관련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	15
41. 삼성생명-삼성SDS간 거래에서 지연배상금 미지급 사례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	15
42. 가족관계·사적관계 등 뒷광고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	15
43. CP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ESG관련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15
44.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선불식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할 것	15
45.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	16
46. 효성그룹의 진흥기업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	16
47. 기업조사에 대한 정교한 사전 통제방안 검토할 것	16
48.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	16
49.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하여 삼성전자를 지원한 행위가 사원판매, 끼워팔기, 부당지원 등 위법행위가 아닌지 조사할 것	16
50.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및 자주적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·판촉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것	17
51.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20%를 초과하는 SK E&S의 가스 연체요금 이율 (연24%)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	17
52. 방송분야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탁 계약서의 불공정, 불합리성에 대해 검토할 것	18
53. 카카오택시 관련 카카오블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할 것	18

54.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유통기한에 따른 품목별 대금지급 기한 세분화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-----18
55. 골프장 이용 관련 약관변경, 가격인상, 소비자해지 거부, 위약금 등 소비자 불만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약관 개정 및 행정지도를 검토할 것-----19
56. 커피, 치킨, 제과제빵 상위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조치할 것-----19
57. 쿠팡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것-----19
58. 쿠팡의 자사제품(PB) 우선 노출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혐의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것-----19
59. 쿠팡과 같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20
60. 셴수학의 가맹지사 해지(공정거래법)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(가맹사업법)건을 신속히 처리하고, 이중적 지위를 갖는 가맹지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할 것-----20
61.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문제 발생 없이 사기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-----20
62. 금융기관과 콜센터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및 전수조사를 통한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것-----21
63.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보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'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' 개정을 검토할 것-----21
64. 야놀자의 숙박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-----21
65.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-----21
66.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의 기술 거래를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상황을 보고할 것-----22

67. 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-----22
68.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지원을 유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-----22
69. 플랫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사업자들에게 자회사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-----22
70. 집합투자기구로 단순한 투자 도관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-----23
71. 구글 및 애플 앱마켓의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-----23
72. 인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의 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 조치할 것-----23
73.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의 제보 중 채택된 건들의 시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-----24
74.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해 명확한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할 것-----24
75. 포스코A/C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및 발주처의 행정처분요청 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-----24
76.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각 조항별로 재검토할 것----24
77.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25
78. 모·자회사 간 거래까지 규제하려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-----25
79. 대한항공·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, 결합 심사 추진 일정 및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-----25
80. 조달청에 의결서 통보를 한 사건 중 다수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의무 고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26
81.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였더라도 감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-----26

82.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	27
---	----

## (한국소비자원: 11건)

1. 개인 간 거래(C2C)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-----	28
2. 지자체 운영 헬스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것-----	28
3.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-----	29
4.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-----	29
5. 소비자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-----	29
6.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-----	30
7.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거래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-----	30
8. 신유형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) 유효기간 및 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검토 후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-----	31
9.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 품질 제고 및 소비자 구제 강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-----	31
10.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---	32
11.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것-----	32



**(한국공정거래조정원: 3건)**

1.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성립률 향상 등의 분쟁조정 실적 개선을 위한 분쟁조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-----33
2. 중소기업자·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원 분쟁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기관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-----33
3. 향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을 위한 의견 청취 시 다양한 협회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-----33

## 《공정거래위원회 소관》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<p>1. 플랫폼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자사우대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사우대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관련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제정안*을 마련하여 행정예고('22.1.6)</li> <li>*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(안)</li> <li>- 관계부처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정(안)을 수정·보완하여 연내 심사지침 제정을 완료할 계획</li> <li>○ 아울러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·시정활동도 지속</li> </ul>
<p>2. 라이브커머스 및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문제에 대한 관련 시장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라이브커머스) 관련 시장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('21년 하반기),</li> <li>- “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”을 선발하여 거짓·과장 광고 등 관련법 위반 모니터링을 추진('22.7월~11월)</li> <li>○ (미인증 제품 구매대행) 국내유입 미인증 위해제품 등의 판매차단을 위해 관계기관*과 공동 대응하였으며,</li> <li>* 공정위·환경부·식약처·관세청·국표원·소비자원</li> <li>- 소비자들이 제품 인증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 인증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임</li> <li>* '22년도 예산 483백만원</li> </ul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3. 전자상거래법 통과 이전, 개인 간 거래에서(C2C)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과 피해 및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p>○ 중고거래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이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적발 시정조치* 하고 있음</p> <p>* 번개장터 등 3개 중고거래 플랫폼('21.11월), 네이버 등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('22.2월) 등</p> <p>○ 앞으로도 그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</p>
<p>4. 렌터카 사고시 면책금, 휴차료 등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</p>	<p>○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('21.10.29)</p> <p>- 관련 사업자단체에 개정 표준약관 통보 및 사용권장을 요청함('21.11.4)</p>
<p>5.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회사 선정 입찰 및 6개 필지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의 의심됨에 따라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할 것</p>	<p>○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관련 의혹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*인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움</p> <p>* 입찰방해죄(형법 제315조)에 해당 가능</p> <p>○ 추후 제보 등을 통해 입찰 담합 혐의 확인 시 조사 여부 검토 예정</p>
<p>6.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정위는 스스로 청렴도를 높여 공정위의 권위를 세우고, 공정위의 심사 및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것</p>	<p>&lt;청렴도 평가&gt;</p> <p>○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 중이며, '21년에는 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음</p> <p>- 사건처리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 제도를 착실하게 운영 중</p>

<p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를 기존 4급에서 7급까지로 대폭 확대 운영 중</li> <li>- 사건처리 부서 직원의 신규 주식취득 제한 제도 도입, 국별 청렴간담회 개최 등</li> </ul> <p>○ 향후 공정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, 사건처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</p> <p>&lt;민원서비스 평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 중이며, '21년에는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라등급으로 이전연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음</li> <li>-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</li> <li>-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클리닉 운영</li> <li>-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</li> </ul> <p>○ 향후 공정위는 민원만족도 향상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</p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7. 미국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(구조적 분리 등)과 같은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것</p>	<p>○ 미국·EU 등 해외 입법동향을 분석하는 한편, 국내 디지털시장의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(21.12), 이를 토대로 국내 시장에 맞는 경쟁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</p> <p>- 국내·외 시장상황 및 법체계의 차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</p>
<p>8. 동의를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중소기업의 동의를결 제도 신청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</p>	<p>○ 동의를결 처리 절차 단축을 위한 「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 · 시행(21.12.31.)</p> <p>- 동의를결 관련 위원회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마련</p> <p>○ 하도급법 등 4법률(대리점법, 대규모유통업법, 가맹사업법, 하도급법) 및 방문판매업 동의의결제도 시행 예정(22년 6월~7월 중)</p> <p>- 소액 · 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 다양한 시정방안과 자발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함</p>
<p>9. 상습 범위반 사업자의 법 위반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</p>	<p>○ 상습범위반 사업자 법 위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(해당 의원실) 설명을 완료하였음</p> <p>- 상습 범위반사업자 중 추가적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대상 직권조사 강화 및 2회 이상 법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 등</p>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습 범위반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*에서 제외</li> <li>* 대기업·중견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체결 이행실태를 평가, 우수업체는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,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</li> <li>- 또한, 상습 범위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규정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유도 예정</li> </ul>
10.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</li> <li>- 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국 업무설명회 개최 시 홍보 추진</li> <li>- 중기중앙회 등 협회와 협업을 통해 홍보</li> <li>○ 내부 직원 대상 교육 실시</li> <li>○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 · 처리절차 정비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</li> <li>-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법률에 대리점법 · 약관법을 추가 · 확대</li> <li>- 업무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는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반영 등</li> </ul>
11. 네네치킨이 패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음</li> <li>* 네네치킨 대표의 배임죄 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 ('21.8월 1심 선고)</li> </ul>

<p>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12. 가맹점의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구속의 범위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</p>	<p>○ 구속조건부 거래를 포함하여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(~'22.12)</p>
<p>13. 기업결합 심사 인력 확충 및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p>○ 기업결합 심사의 신속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인력·조직 보강 및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 방안*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</p> <p>* 해외의 M&amp;A심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용역 진행(법제연구원, '22.6~11월)</p>
<p>14.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등급 평가 제도 평가 신청을 저조, 예산 부족 등 제도 운영 문제점을 개선 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</p>	<p>○ CP등급평가 우수기업에게 공공조달 우수업체 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 중('21.12.7, 1차 협의)</p> <p>- 그 외, CP도입·운영 매뉴얼 마련·배포, CP포럼 개최('21년 2회) 등 CP등급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</p> <p>* 평가신청 기업수 증가 [( '21) 10개 → ( '22) 16개]</p> <p>** 「2022년도 상반기 CP심포지엄」 개최('22.6.9)</p> <p>○ 또한,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* 됨에 따라 법안 논의 시 의견 제시 예정</p> <p>* 2021.11.10, 윤관석 의원 발의 (CP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의 법적근거 마련)</p>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15. 해운 공동행위 사건 관련 과징금 결정 시 해운업계의 특성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	○ 전원회의('22.1.12)에서 해운업계의 특성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액 등 조치수준을 결정하였음
16. 해운담합 사건을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, 심의신속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할 것	○ 해운담합 사건 모두 심의 완료되었음 - 한-동남아 노선: '22. 1. 12.(전원회의) - 한-일 노선: '22. 5. 25.(전원회의) - 한-중 노선: '22. 5. 31.(전원회의)
17. 와인수입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할 것	○ 사건 접수 및 처리 경과를 의원실에 전화 및 이메일로 설명('21.10.19) ○ 동 사건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계획임
18. 사건처리 장기화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	○ 사건처리 장기화 등 사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·추진 중 - 이를 위해 '21년 말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「사건업무 개선 TF」 운영을 통해 내부적으로 사건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
19. 사건처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체가 다수인 부산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연구용역* 및 내부 검토를 통해 경인사무소 신설, 부산사무소 확대 등 지방사무소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음 * 지방사무소 사건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보고서(한국행정학회, '21.10.29)

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p>○ 부산사무소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, '21.10월 이후 내부 전보, 전입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이며, 사건경력이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사건처리역량을 강화하였음</p>
<p>20.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 증원을 통한 별도 조직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</p>	<p>○ 글로벌 M&amp;A 심사 등 글로벌 기업 사건처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 · 조직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</p> <p>-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p>
<p>21. 생협 당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필요 및 공제사업이 연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</p>	<p>○ 생협 공제사업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T/F*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생협 연합회측과 실무회의도 병행함</p> <p>* 보험 및 보험공제, 공제사업 운영 협동조합, 금감원 등 전문가로 구성(생협측 추천인사 포함)</p> <p>-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한 시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음</p>
<p>22.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</p>	<p>○ 항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고 '22.2.21. 조건부로 승인조치함</p> <p>- 280개 노선 중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제선 여객 26개, 국내선 여객 14개 대상 슬롯 ·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와 함께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 부과</p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p>- 해외 심사 진행중으로 향후 동일 노선에 대해 상이한 외국당국의 조치가 있을 경우 수정 · 보완을 거쳐 최종 조치안을 결정 예정</p> <p>* 국토부와는 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업무 협약('21.10.25)을 체결하고, 수차례 협의</p>
<p>23. 5G 관련 강매행위 및 불공정 약관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과기부와 방통위를 참여시켜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 것</p>	<p>○ 5G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음</p> <p>○ 과기부·방통위와 협의하여 “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” *을 마련하고,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 하였음('21.12.27)</p> <p>* 5G 품질개선 및 커버리지 확대, 5G 요금제·단말 선택권 확대, 유통점 불법행위 방지 등</p>
<p>24.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을 신속히 조사하고, 같은 그룹 내 두 곳 이상의 계열사에서 응찰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</p>	<p>○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,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담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음</p> <p>○ 공동행위 심사기준 상, 대표자가 같거나 실질적·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미 입찰 담합으로 조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</p> <p>*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실질적·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사업자간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(제40조 제1항)을 적용토록 규정</p>

<p>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25.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했던 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게임산업법 시행 전까지 공정위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법 추진에 필요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관계부처에 최대한 공유·협조하겠으며,</li> <li>○ 게임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에는 엄정히 조사·제재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음</li> </ul>
<p>26. 플랫폼 기업의 M&amp;A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플랫폼 기업은 급격한 계열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'16~21.8월 기준 M&amp;A건(78건) 중 대부분이 현행기준 하에서 간이심사·안전지대 등에 해당하여 독과점 형성 방지에 한계</li> <li>○ 해외 제도개편 및 연구동향, 기존 심결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(용역계약 완료, 기간: '22. 6.~11월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특성이 M&amp;A심사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
<p>27. 기술유용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기술유용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의원실에 보고('21.10.14)하였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를 '22.3월 완료하였으며,</li> <li>- 전문적·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한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였고,</li> </ul> </li> </ul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권조사 확대를 위해 한시조직인 기술 유용팀을 정식과로 승격하고 인원을 확대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 하고 있음</li> <li>○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, 개선 · 보완 하도록 하겠음</li> </ul>
<p>28.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평판 하락, 소비자 불매운동시 피해를 입는 대리점주를 위해 비현실적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경영진과 대리점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양유업 측은 점주 측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· 시행하였음</li> <li>-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점주 측의 요구사항을 수렴('21.12.7)하여 이를 남양유업에 전달('21.12.16)한 바 있음</li> <li>○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이 완료('22.6.8)되어서 동 센터가 '23.3월에 설치될 예정이며,</li> <li>- 본사와 분쟁이 발생한 대리점에 대한 컨설팅, 법률지원(소장 작성, 비용 지원) 및 본사와의 대화·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임</li> </ul>
<p>29.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물품형 상품권의 가액 이하 결제 및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, 브랜드 사업자, 상품권 발행자와 함께 모여 적극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카이를 포함한 주요 브랜드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함('21.10.14)</li> <li>*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물품형 상품권의 물품이 해당 매장에 없을 때,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하였음</li> <li>○ 금액형 상품권 출시 확대 및 환불 절차 개선 추진 중임</li> </ul>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30.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	○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하고,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
31.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	○ 현재 관련 법안(전자상거래법 개정안)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, 향후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음
32. 나이키 미국 본사의 원자재 납품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, 계약 종료 등 행위의 공정 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	○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음
33. 롯데마트 코리아에 대한 나이키코리아의 제품 공급 중단 사례 등 국내 기업, 가맹점주들이 해외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	○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며, -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
34. 쿠팡이츠의 수수료율 현황 등 업계실태를 확인하고 영세 ·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	○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수수료 수준 등 거래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- 모니터링 과정에서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겠음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35. 해외 구매 대행 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약 철회 권리 보장 및 플랫폼 기업의 의무책임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p>○ 현재 관련 법안(전자상거래법 개정안)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, 향후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음</p>
<p>36.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자사주 맞교환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것</p>	<p>○ 자사주 맞교환 관련 사항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</p> <p>- 자사주의 처분방식 및 의결권 문제는 상법 규정에 따른 모든 회사에 나타나는 현상이고,</p> <p>- 자사주 이슈는 해외에서도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</p>
<p>37.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례와 같이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, 심사지침 개선 등을 검토할 것</p>	<p>○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,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절차종료('22.5.10) 하였음</p> <p>-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가 진행 중임</p>
<p>38.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</p>	<p>○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방지 제고 및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,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</p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p>○ 지방공기업에게도 입찰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경우,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가능해지고, 이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입찰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</p>
<p>39.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에 관한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상임이사제도 운영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</p>	<p>○ 공정위는 비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업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비상임위원은 신규 위촉시 비상임위원으로 심결에 참여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과 누설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받음</li> <li>- 퇴직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제119조의 비밀엄수의무 규정을 적용받아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충분히 고지하고 비난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음</li> <li>- 다만, 비상임위원의 재취업에 관한 제약이 과도할 경우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할 필요</li> </ul>

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40. 플랫폼의 수수료 책정 체계 등에 대한 평가·분석 및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의 사업범위 확장과 관련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	○ 국정과제로 ‘플랫폼 분야 자율규제’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,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현황 파악 등을 진행할 계획
41. 삼성생명-삼성SDS 간 거래에서 지연배상금 미지급 사례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	○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음 *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('22.1월)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 통보('22.2월말)
42. 가족관계·사적관계 등 뒷광고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	○ 가족·사적관계라도 광고성 게시글로서 ‘뒷광고’에 해당한다면 「표시·광고법」에 따라 규율이 가능함 - 관련한 법위반 ‘뒷광고’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음
43. CP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ESG 관련 의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○ CP등급 평가 시 ESG도입 및 공시 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관련 공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* CP등급평가운영지침 개정 추진(연내) ** 「2022년도 상반기 CP심포지엄」을 개최하여 ESG 경영 연계 CP확산방안 논의(22.6.9.)
44.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선불식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할 것	○ 일부 업종(카페전문점)의 신유형 상품권 취급실태,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, -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보험 가입을 권고하였음(→미가입 4개사 모두 보험 가입신청 기완료)

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45.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	○ 해당 사안에 대한 범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하겠음
46. 효성그룹의 진흥기업 부당지원 행위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	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음
47. 기업조사에 대한 정교한 사전 통제 방안 검토할 것	○ 공정거래법 · 조사절차규칙 등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 대한 사전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왔음(~'21.12월)  * <조사 관련 사전통제 강화 주요 내용> ① 현장조사 시 반드시 조사목적, 조사시간, 조사대상, 조사방법 등을 공문에 기재하여 교부 ②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 실시 ③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현장조사를 종료하되 예외적으로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교부 ④ 조사단계 이후인 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 ○ 이를 각국 · 지방사무소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고, 관련 제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가겠음
48.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	○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(공시대상, 공시주기 등)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
49.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하여 삼성전자를 지원한 행위가 사원 판매, 끼워팔기, 부당지원 등 위법 행위가 아닌지 조사할 것	○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음

<p>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50.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및 자주적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·판촉 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 또는 기 완료</li> <li>-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(신고)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, 법안 논의를 성실히 지원할 예정 * 전해철, 이동주, 이학영 의원안</li> <li>- 광고·판촉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(14 공포, 7.5 시행) 및 관련 시행령 개정(7.5 시행) 완료함</li> </ul>
<p>51.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20%를 초과하는 SK E&amp;S의 가스 연체요금 이율(연24%)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SK E&amp;S(소속 7개 도시가스회사)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적용 중인 가스 연체요금 이자율 현황,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파악 중</li> <li>-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스 연체요금의 이자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해당 의원실에 방문하여 설명 예정</li> <li>○ 다만, 가스 연체요금 이자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해지므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</li> </ul>

<p>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52. 방송분야의 계약관계에 있어 위탁 계약서의 불공정, 불합리성에 대해 검토할 것</p>	<p>○ 약관법 적용을 통한 규제보다는 표준 계약서 개정(문체부)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(노동부) 등에 따른 업계 관행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</p> <p>- 노조는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관법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</p> <p>* <b>약관법 제30조(적용 범위)</b> ① 약관이 「상법」 제3편, 「근로기준법」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<u>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53. 카카오택시 관련 카카오블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할 것</p>	<p>○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블루에게 콜을 몰아 준다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</p> <p>-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안전상정(21.4.22)되었으며,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 및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</p>
<p>54.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유통기한에 따른 품목별 대금지급 기한 세분화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</p>	<p>○ 현재 신선 식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대해 수정의견(신선식품 직매입거래의 경우 30일 → 50일)을 제출하고 협조하겠음</p>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55. 골프장 이용 관련 약관변경, 가격 인상, 소비자해지 거부, 위약금 등 소비자 불만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약관 개정 및 행정지도를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국내 주요 골프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사를 실시 중(22.1월~)</li> <li>○ 금년 중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고,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위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음</li> </ul>
56. 커피, 치킨, 제과제빵 상위 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대부분이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조치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공정위는 치킨업 등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</li> <li>○ '22년부터 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납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가점을 부여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 노력을 더욱 장려할 계획임</li> </ul>
57. 쿠팡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는 지난 9월 (주)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(3,297백만원) 부과한 후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</li> <li>- 해당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추가로 포착되면 조사를 진행하겠음</li> </ul>
58. 쿠팡의 자사제품(PB) 우선 노출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혐의 발견 시 엄정히 조치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쿠팡의 자사제품(PB) 우대 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 중</li> <li>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 예정</li> </ul>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59. 쿠팡과 같이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 지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마련 중임</li> <li>-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음</li> </ul>
60. 썬수학의 가맹지사 해지(공정거래법)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(가맹사업법)건을 신속히 처리하고, 이중적 지위를 갖는 가맹지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보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주)신사고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</li> <li>-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위반 여부를 검토 중임</li> <li>* 신고인이 최초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·수정하고 있어 처리에 장기간 소요</li> <li>* 가맹지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 미대상, 법 위반사항이 없는 등의 사유로 무혐의 등 처분하였음</li> <li>○ 사건처리 결과를 토대로, 필요 시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 및 보고(상시)</li> </ul>
61.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문제 발생 없이 사기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간 거래(C2C)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 시정조치* 하였음</li> <li>* 번개장터 등 3개 중고거래 플랫폼('21.11월), 네이버 등 4개 전자상거래플랫폼('22.2월) 등</li> <li>○ 앞으로도 관련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</li> </ul>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62. 금융기관과 콜센터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작성 및 전수조사를 통한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것	○ 금융기관과 콜센터 간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- 그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·대응
63.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특정보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‘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’ 개정을 검토할 것	○ 업계 · 노동계 · 관계부처 · 보험사 참석 간담회('21.8·12월) 논의 결과, 대표적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*이 있어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에 방문하여 설명('22.3.7.) * 단체보험 요청 자체는 리스크 관리 등 합리적 사유가 있고, 거래개시 후 특정 보험 전환 요구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기 어려움
64. 야놀자의 숙박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	○ 2개 숙박업 사업자(야놀자, 여기어때)의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와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관행*을 자진 개선하도록 유도함('22. 2월) * 계약서상 광고 노출기준 및 쿠폰발행 비율 불명확, 계약 서명절차 누락 등 - 신고내용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 * 2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한 2차례 현장조사 실시('20.7월, '22.4월)
65.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	○ 현재 노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*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임 * 노동조합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 -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

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66.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와의 기술 거래를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상황을 보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대건설(주)의 거래거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의뢰('21. 8)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서울사무소로 접수됨('22. 1)</li> <li>○ 현장조사('22. 5)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및 법 위반 여부 검토 중</li> </ul>
67. 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가 전담하던 6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및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완료(5.20(5개 행위) 및 7.5.(1개 행위) 개정 가맹사업법령 시행 예정)하였음</li> <li>*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,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 수행 가능</li> </ul>
68.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지원을 유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ESG 지원이 필요한 분야, 지원실적 평가 방법 등 고려하여 ESG 관련 평가항목의 강화·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음</li> </ul>
69. 플랫폼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 사업자들에게 자회사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픈마켓 서비스 내에서 특정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*와는 차이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</li> <li>* 인앱결제의 경우 앱마켓에서 앱을 구매한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앱 내에서 이루어진 결제까지 특정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</li> <li>-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제출하였음('21.10월)</li> </ul>



<p>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p>
<p>70. 집합투자기구로 단순한 투자 도판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것</p>	<p>○母子구조 상장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국토부와 협의 · 발표* 하였음</p> <p>* 「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」 발표 ('22.1.13., 국토부·공정위·금융위)</p> <p>- 추후 국토부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</p>
<p>71. 구글 및 애플 앱마켓의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</p>	<p>○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건에 대해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</p> <p>* (공정거래법) 구글 및 애플, (약관법) 구글</p> <p>- 다만, 작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다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었고,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조사* 중인만큼,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</p> <p>*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</p>
<p>72. 인증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의 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 조치할 것</p>	<p>○ 온라인 판매사업자(통신판매업자)가 인허가 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* 개정 중**</p> <p>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」</p> <p>** 현재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(행정예고문)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</p>

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<p>73. 소비자 법집행감시요원의 제보 중 채택된 건들의 시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</p>	<p>○ 제보 중 채택된 건들의 시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시요원 모집을 상반기 실시(8월→6월) 하고, 활동기간을 확대(2개월→5개월)</li> <li>-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한 자진시정 요청 신속화(일괄 1회 취합 후 요청→매월 1회 취합 후 요청)</li> <li>- 감시요원이 기채택된 제보 건의 시정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함</li> </ul>
<p>74.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상 분쟁해결에 관해 명확한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p>○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이미 반영한 바 있음('20.9월, 11월)</p> <p>* 예식, 여행, 항공, 숙박 및 외식서비스 분야</p>
<p>75. 포스코A/C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및 발주처의 행정처분요청 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</p>	<p>○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신고인이 피조사인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여 심사 절차종료 하였음('22.2월)</p>
<p>76.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각 조항별로 재검토할 것</p>	<p>○ 하도급법상 제재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형벌규정의 정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함</li> </ul> <p>* 위 내용은 해당 의원실 방문 후 설명 완료(4.15)</p>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77. 과징금 산정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징금 산정근거의 명확성 제고 위해 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·시행('21.12.31)</li> <li>- 정액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하고, 과징금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정하는 등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</li> </ul>
78. 모·자회사 간 거래까지 규제하려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·자회사 간 거래의 목적, 조건, 효과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음</li> </ul>
79.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, 결합 심사 추진 일정 및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권 기업결합 심사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음</li> <li>-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항공 여객·화물운송분야 경제분석 실시('21. 4~10월)</li> <li>- 국내외 항공사 등의 진입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'21.9~12월)</li> <li>- 항공당국(국토부)과 수차례 실무협의('21.10~12월)를 통해 의견을 수렴·반영</li> <li>- 심사보고서 발송('21.12.29) 후 결합 당사회사 의견 청취</li> <li>- 공개된 전원회의('22.2.9)를 통해 시정 조치 의결('22.2.21)</li> </ul>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80. 조달청에 의결서 통보를 한 사건 중 다수가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의무고발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에 통지한 입찰담합 사건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임박해서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들 사건 중 상당수는 조사개시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임박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</li> </ul> </li> <li>○ 그럼에도 공정위는 현재 주기적 사건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효 임박한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, 앞으로 더욱 중점 대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음</li> </ul>
<p>81.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였더라도 감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, 중소기업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중복감면을 제한하고 있음(공정거래법 제4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담합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동일한 내용의 담합 시는 감면혜택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며,</li> <li>- 새로운 담합을 하더라도 당초 감면일 기준으로 5년 내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li>○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어려운 담합조사에서 조사 협조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,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</li> </ul>

<p>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 중소기업들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대기업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음</li> </ul>
<p>82.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리 단계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</li> <li>-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간담회 (1.7, 2.18)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였음</li> <li>○ 아울러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, 대·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</li> <li>-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</li> <li>*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표준비밀유지계약을 마련·배포('22.2월)</li> <li>-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 및 상향식 제·개정 방식을 통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임</li> </ul>

## 《한국소비자원 소관》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. 개인 간 거래(C2C)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고거래플랫폼(C2C) 거래 실태조사 추진 중('22.2~6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고거래 이용자 피해 분석 및 보호 방안 등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다만, 현행법률상 소비자가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품질·하자 및 계약 등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에는 한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향후 '전자상거래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'(가칭) 설치 등 C2C 분쟁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2. 지자체 운영 헬스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*으로 구성된 서울·인천·경기 기초지자체 「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개선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용료 반환 규정이 없거나, 관련 규정(체육 시설법, 방문판매법,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표준약관 등)에 비해 불리</li> </ul> </li> <li>- 21개 기초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수용했으며, 이 중 11개 지자체의 조례 개정 완료('22.5 기준)</li> <li>○ 향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사업 및 소비자기향성 개선사업과 연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자체 조례·규칙을 지속 발굴·개선</li> </ul>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<p>3.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정위가 개정한 ('20.4분기) 주요 5개 품목(예식·여행·항공·숙박·외식서비스)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</li> <li>- 추가적인 기준개정 필요 시 공정위의 및 관계부처·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예정</li> <li>○ 아울러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 교육 강화 및 의료·금융·자동차 등 분야 전문가 자문 확대 추진</li> </ul>
<p>4.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골프장 이용실태 조사 결과, 일부 골프장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개선을 권고('22.1)</li> <li>- 골프장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, 예약 취소 시 위약 기간 및 과도한 위약금 개선 등</li> <li>* 소비자권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추가 조사 및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 실시('22.2~4)</li> <li>○ 현재 공정위가 골프장 위약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명시한 표준약관 개정 추진 중</li> </ul>
<p>5. 소비자 분쟁조정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쟁조정 업무 단계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</li> </ul>

<p>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·유사 품목에 대한 일괄처리 및 조정 전 합의권고 기능을 강화한 ‘사전조정 제도’ 운영</li> <li>- 조정결정서 간소화 규정 마련을 통한 통지 신속화 등</li> </ul>
<p>6.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실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('22.3)</li> <li>-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'22년 상반기 중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</li> <li>○ 향후 머지포인트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집단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, 적극적인 소송지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</li> </ul>
<p>7.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거래 정보 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픈마켓사업자에 대해 입점사업자들의 정보제공 관리·감독 강화 권고</li> <li>- 취소·환불 등 거래조건 표시 강화, 배송단계(현지/국내)에 따른 취소·환불 비용 구분 등</li> <li>○ 해외구매대행 관련 실태조사 추진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반품 실태조사('22.3~6), 구매대행 사업자의 국내외 제도 인지 실태조사('22.4~7)</li> </ul> </li> <li>○ 소비자가 국제거래 전 청약철회 조건, 반품비 등 주요 구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역량 강화 지원</li> </ul>

<b>시정·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	<b>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 제작·배포 예정('22.8~9)</li> </ul>
<p>8. 신유형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) 유효기간 및 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검토 후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유형 상품권의 일종인 '커피 모바일 상품권' 관련 거래 실태조사 실시</li> <li>-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거나, 모바일앱 주문 취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커피전문점 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('22.4)</li> </ul>
<p>9.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 품질 제고 및 소비자 구제 강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부처인 공정위에서 상담 품질 제고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</li> <li>- 상담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차단 시스템 구축('21.12.)</li> <li>- 상담 데이터 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담원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중(~'22.12)</li> <li>○ 소비자들은 참여기관·단체 상담원 교육 등을 통해 상담 전문성 확보 추진</li> <li>- 머지포인트 등 신유형의 소비자피해 및 이슈에 대한 상담가이드 제공(상시)</li> <li>- 1372소비자상담센터 실무협의체를 통한 상담 품질 제고 방안 논의 등('22.4~, 분기별)</li> </ul>



<p><b>시정 · 처리요구사항</b> (건의사항 포함)</p>	<p><b>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</b></p>
<p>10.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감독원의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*('20.7월) 이후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가 없어 임차인 보호 조치가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파악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구상권 행사 제한</li> <li>○ 다만, 향후 보험사가 개선된 약관과 달리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구제 진행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필요 시 유관기관(금감원 등)과 공동 대응</li> </ul>
<p>11.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것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법률 및 내규 등에 따라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완료</li> <li>○ 상임위원 등 임원에 대한 문책 등 근거 규정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상 의무 및 직무정지에 대한 규정 신설</li> <li>- 부정 · 부당행위 발생 시 문책 양정 기준 신설 및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</li> </ul> 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임원 복무규정 개정('22.3)</li> </ul>

## 《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》

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
1.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성립률 향상 등의 분쟁조정 실적 개선을 위한 분쟁조정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	<div>○ 분쟁조정 업무 수행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 · 관행 등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 실적 개선 노력 중</div> <div>○ '22년 5월말 현재 사건처리기간 및 조정성립률은 전년 대비 향상됨</div>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사건처리기간</th><th>조정성립률</th></tr><tr><td>2021년</td><td>49일</td><td>75%</td></tr><tr><td>2022년 (5월말 기준)</td><td>42일 (△7일)</td><td>84% (9%p)</td></tr></table>	구분	사건처리기간	조정성립률	2021년	49일	75%	2022년 (5월말 기준)	42일 (△7일)	84% (9%p)
구분	사건처리기간	조정성립률								
2021년	49일	75%								
2022년 (5월말 기준)	42일 (△7일)	84% (9%p)								
2. 중소기업자 ·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원 분쟁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기관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	<div>○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인력 및 예산 확충을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</div>									
3. 향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을 위한 의견 청취 시 다양한 협회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	<div>○ 조정원은 향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 시 최대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div>									